

요 약 보 고 서

제 1차 한국 어르신들의 일과 삶 패널(KSWL)

2024년 조사 결과 요약

조사 기간 2024년 10월 ~ 12월 | 조사방법 태블릿 기반 대면 면접(TAPI)
조사 대상 전국 60~74세 총 6,000명

한국노인인력개발원



춘천미래동행재단
정책개발전담

01 조사 설계와 목적

- 한국 어르신들의 일과 삶 패널(KSWL)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이중 패널 모형을 적용, 참여 여부에 따른 삶의 변화와 정책 효과를 생애사적·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함.
- 제 1차 조사는 향후 종단분석의 기준선이 되는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, 한국형 활기찬 노년지수(K-AAI) 등 다양한 삶의 지표를 통해 노인 일자리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음.

□ 표본과 가중치

- 참여자 표본(3,000 명)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권역·사업유형별 층화추출, 비참여자 표본(3,000 명)은 등록센서스 기반 2단계 층화집락추출로 선정함.
- 설계가중치 → 무응답조정 → 사후층화의 3단계 조정을 거쳐 모집단은 참여자 약 62만명, 비참여자 약 960만 명으로 추정됨.

□ 행정데이터 연계

- 고령 응답자의 기억 오류와 응답 피로를 줄이기 위해 참여자 3,000명의 사업유형·참여기간·급여액 등 핵심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·검증함.
- 이를 통해 측정오차와 결측을 줄이고 종단분석에 적합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함.

핵심 지표	수치
이중패널 표본 규모	6,000명(참여자·비참여자 각 3,000명)
60~74세 경제활동 참여율	64.5%
향후 일자리 참여 희망 비율	70.1%
2025년 간이조사 패널 유지율	약 95%

02 어르신의 일 - 양극화와 미스매치

□ 노년기 노동은 ‘선택’ 이 아닌 ‘필수’

- 경제활동 참여 어르신의 90% 이상이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며,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에서도 수입 목적 참여가 높음
- 참여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고, 60대 초반에서 정점을 찍은 뒤 70대로 갈수록 감소하는 연령 반비례 경향이 뚜렷함.
- ‘노인 부부와 자녀동거’ 가구의 참여율이 가장 높아, 자녀 부양 부담이 노인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기제로 작동함이 시사.

□ 일자리의 질적 양극화

- 저학력일수록 무급 가족종사자, 고학력일수록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 학력 간 격차가 뚜렷하다.
- 저소득층(2분위)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비율이 100%에 달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- 남성은 전일제·장시간, 여성은 시간제·단시간 중심으로 근로 형태의 성별 이중 구조가 확인됨.

□ 경력 단절과 미스매치

- 현재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무관하다는 응답이 높았고, 특히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의 76.1%가 생애 경력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.
- 고학력 베이비부머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음을 의미함
- 가교 일자리 역시 은퇴 과정의 연착륙이라기보다 생계를 위해 선택하는 불완전한 형태에 가까움.

정책 제언

- ① 저학력 고령층 대상 공익활동형은 소득 보전·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유지
- ② 베이비부머의 전문성을 활용할 민간 연계형 일자리 발굴 시급
- ③ 고학력자는 직무 심화, 저학력자는 산업 안전 중심의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필요

03 노인 일자리 사업 - 누가, 왜 참여하는가

-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아 소득 1~2분위에서 약 30%, 5분위에서 10% 수준임
- 노인부부 가구(48%)와 독거노인(33.4%)의 참여율이 특히 높아, 가족 지원이 부족한 취약 가구에 노인 일자리가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.

참여 구조	수치	해석
여성 참여자 비중	75.1%	경력 단절·경제적 취약성의 복합 결과
공익활동형 비중	50.6%	사회서비스형 24.5%가 뒤를 이음
시니어클럽 수행 비중	43.9%	일부 기관에 사업 집중
프로그램 완주율	93.9%	중도포기율 매우 낮음, 높은 안정성
평균 참여기간	5.4~5.7개월	소득·학력·가구형태와 무관하게 동일

□ 참여 동기 - 경제적 필요가 80% 이상

- 참여 이유는 생계비 마련 58%, 부수적 용돈 마련 23.2%로 경제적 필요가 압도적이며, 저소득층일수록 생계비 목적 비중이 높음.
- 참여의 의미로는 ‘가족에게 도움이 됨’ (40.3%), ‘존재감 확인’ (29.4%), ‘성취감’ (24.1%) 순으로 경제·정서적 의미가 함께 작동함.

□ 성별·학력에 따른 급여 격차

구분	월평균 급여
남성	68.64만원
여성	44.63만원(남성 대비 약 35% 낮음)
대학원 졸업	93.4만원
초등 졸업 이하	38.66만원(격차 약 55만원)

□ 비참여자의 인식

- 비참여 노인의 74.5%가 노인 일자리를 알고 있으나 신청 경험은 1.6%에 불과함.
- 72.2%는 향후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, 의향이 있는 응답자 절반 이상 (52.9%)은 경력과 무관한 일자리도 수용할 의사를 보임.

04 경제 – 취약층의 소득 안전망

-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개인소득의 31.52%를 노인 일자리에서 얻음(비참여자 1.25%).
- 소득 1분위와 독거노인, 저학력층일수록 의존도가 높아, 사업이 가장 취약한 집단의 생계를 지탱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함.

구분	참여자	비참여자
생활비가 소득을 초과한 경험	21.2%	10.5%
가구 경제 만족도	16.7%	33.2%
적정 생활비 인식(월)	209.05만원	288.09만원

- 참여자의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더 어렵고, 기대 생활 수준 자체가 제약되어 있음을 시사함.
- 가구 경제 만족도는 소득 1분위 2.4%에서 5분위 48.4%로 가파르게 증가하며, 초등 졸업 이하(23.4%)와 대학 졸업(44.5%)간 격차도 21%p에 달함.
- 보고서는 단순한 참여 확대보다 참여자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, 성별·학력 간 급여 격차 개선, 진입장벽 제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.

05 건강 – 대체로 양호하나, 우울이 임계점

핵심 지표	수치
주관적 건강 '보통 이상' 인식	84.5%
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(IADL) 독립 수준	95.9%
PHQ-9 기준 '우울 아님' 비율	91%
주관적 기대수명	85.95세
주관적 건강 기대수명	81.22세(기대수명과 4.73세 격차)

□ 정신건강이 무너지면 삶 전반이 무너진다

- 중간 정도 이상 우울 집단에서 IADL 의존 비율이 62.7%로 급증하여, 정신건강이 임계점을 넘으면 일상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양상이 관찰됨.
- 심한 우울 집단은 83.2%가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, 51.2%가 불규칙하게 식사하며, 주관적 기대수명도 73.76세로 현저히 낮음.

□ 노인 일자리와 건강의 관계

- 실제 참여 여부보다 참여 희망 여부가 정신건강과 더 밀접했다(희망자 '우울 아님' 93.7% VS 비희망자 84.6%)
- 일상 기능 지표(PHQ-10)에서는 참여자(90.3%)가 비참여자(78.6%)보다 긍정적이며, 매일 걷는 비율도 참여자(41.3%)가 비참여자(29.8%)보다 높음.

□ 생활습관과 복지 요구

- 위험음주 비율은 남성 11.6%, 여성 1.5%로 성별 차이가 컸고, 중강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63.6%로 높음.
- 노인복지 서비스 요구 1순위는 노후 소득 보장(49.4%), 2순위는 건강·보건의료 서비스(29%)임.

06 사회활동 - 1인 가구의 고립, 디지털의 역설

□ 1인 가구의 복합 취약성

- 1인 가구는 주관적 건강·수면의 질·인지기능 점수가 가장 낮고, 외로움·사회적 고립 비율과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의존이 가장 높음.
- 저학력 집단과 함께 외로움·고립 고위험군으로 확인됨.

□ 노인 일자리는 사회참여의 촉진 경로

- 주 1회 이상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약 3배 높았고, 월 10만원 이상 고액 기부 비중도 높음.
- 교제·사회활동 시간 역시 참여자가 더 길어, 노인 일자리가 소득을 넘어 관계 형성과 사회 기여를 매개하는 경로로 작용함.

□ 기기 보유 비율

디지털 지표	수치
스마트폰·패드 보유율	약 97%
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	19.9%
이용량에 제한이 있는 비율	24.7%

- 디지털 문해력 중 건강정보 영역 점수가 가장 낮아, 정보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.
- 직업능력향상교육은 도움 정도가 90%를 넘을 만큼 효과가 크지만, 비수강 사유로는 낮은 기대·시간 제약정보 부족이 꼽혀 접근성 개선이 과제임.

07 문화와 젠더 – 형식적 평등, 비대칭적 역할

□ 일의 의미는 ‘가족’ 으로 수렴

- 노년기 일의 핵심 의미는 참여자(38.6%)와 비참여자(37.5%) 모두 ‘가족에게 도움이 됨’ 으로 나타남.
- 전업주부 노인은 80% 이상이 일을 가족 부양 활동으로 인식했고, 자아실현적 의미는 7% 수준에 그침.
-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(2.7점)은 비참여자(2.56점)보다 높아, 노년기 노동이 심리사회적 안녕에도 기여함이 확인됨.

□ 노후준비의 역설

-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(2.62점)은 비참여자(2.94점)보다 오히려 낮고, 부족하다는 응답도 참여자(42%)가 비참여자(27.6%)보다 높음.
- 사업이 취약층을 포섭하는 안전망임을 보여주는 동시에, 참여만으로는 장기적 노후 안정 체감이 개선되지 않음을 시사함.

□ 공동결정의 형식, 성별 비대칭의 실질

- 가족 내 의사결정은 부모부양(85.4%), 가족행사(79.2%) 등 대부분 영역에서 ‘공동 결정’ 이 과반을 차지함.
- 그러나 생활비·주거 등 경제 영역은 남성 중심, 돌봄·관계 영역은 여성 중심 인식이 뚜렷하고 고연령일수록 강화됨.
- 제도적 성평등 지지는 높은 반면(공적 영역 3.23점) 전통적 성역할 규범은 보수적으로 유지되어(여성규범 2.55점), 제도와 일상 사이의 이중 구조가 확인됨.

□ 고용·복지 제도 인식

- 정년제도는 연장 선호가 우세함(참여자 74.1%, 비참여자 65.8%)
- 생계·복지 책임은 개인 책임 인식(58.3%)이 강했으나,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국가 책임 인식이 과반(51.2%)으로 전환됨.

정책 시사점

노인 정책 수립 시 젠더 관점과 정신건강 요소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며, 노인 일자리 정책 역시 성평등 교육·돌봄 부담 완화·정신건강 지원과의 연계가 필요함

08 결론

- 제1차 조사는 노인 일자리가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적 역할, 건강 유지, 관계형성 등 노년기 삶 전반을 매개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함.
- 동시에 고령자의 삶의 조건과 인식은 지역적 맥락과 생애 경험, 제도적 환경에 따라 뚜렷이 분화되어 나타남.
- 향후 노인정책은 참여 확대를 넘어 지역·건강·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정교한 설계가 요구됨.

출처

천재영 외.2025. '제 1차 한국 어르신들의 일과 삶 패널(KSWL): 2024년 조사'. 한국노인인력개발원